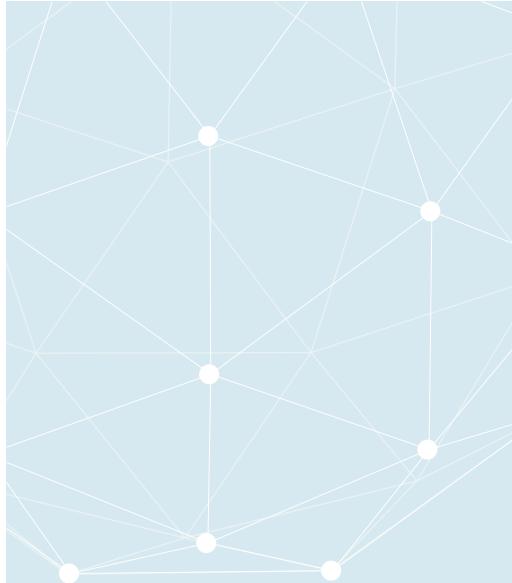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A Report on 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A Report on 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CONTENTS

인사말	05
제1장 K-SDGs 목표수립 배경	06
제2장 K-SDGs 비전 및 추진과정	10
제3장 K-SDGs 수립 내용	16
제4장 K-SDGs 운영 계획	40
제5장 K-SDGs 세부지표 및 2030 목표	42

인사말

지속가능발전은 자연과 사람간의 관계를
상호공생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도
공정하며 상생하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발전입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 UN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8년에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를 한국 상황에 적용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자연과 사람간의 관계를 상호공생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도 공정하며 상생하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은 포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입니다. 이것을 지속가능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주의는 진보와 보수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포용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통하여 적정한 삶의 질을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지난 3년간의 시간이 17개의 광범위한 목표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목표지표 설정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K-MGoS)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4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할 것이며 미진한 지표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2010년 녹색성장정책 이후 약화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범부서적인 위원회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며,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며, 우리의 환경, 사회, 경제의 체질을 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이해관계자, 범부처 협의체, 정치인, 의사결정자 여러분들의 폭넓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지속위원회, 지속전문위원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지속가능 전략담당관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 태훈 위원장

2019년 7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문 태훈**

제1장 K-SDGs 목표수립 배경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국제 사회에서는 UN을 중심으로 질병, 불평등 등 주로 개도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였다. 이후 UN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였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정의제로 채택하고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참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 지속가능 균형발전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제1차~제3차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목표는 행정 중심으로 설정되어 국민 삶의 질을 체감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기에는 한계에도 도달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51개 이행과제 중 80개는 환경분야 과제로 구성되어 사회 및 경제 분야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설정 단계부터 경제, 사회, 환경 분야간 상호 조화를 고려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였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발활동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취약요인

사회적 문제

지속적인 저출생 및 고령화 구조로 인하여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50년 후 60% 수준까지 급감하여 사회적 지속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소득분배 악화로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높아지고 소득계층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6.5배에서 2018년 7.9배로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 성인의 만성질환자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적 문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2018년 기준 3%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대로, 2030년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적 지속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고용률인 53.3%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42.1%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또한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3년~2015년 평균 23.8% 수준으로 세계 평균(102.5%), 호주(275.7%), 캐나다(195%)에 비하여 크게 낮아 식량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환경적 문제

기후변화, 폐기물, 동식물 멸종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전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 폭염 등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생태계·건강피해, 동식물 멸종속도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리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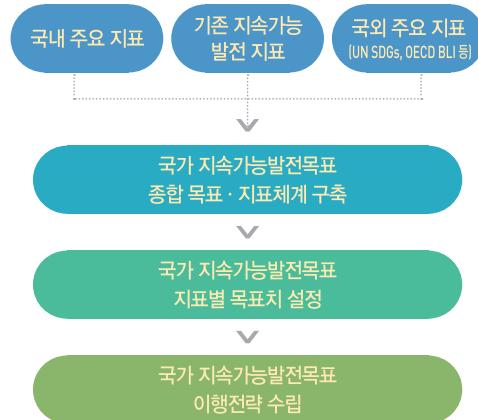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지출은 2013년 기준 11% 수준으로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16조원으로 큰 부담인 상황이다. 특히 청년시기에 약 20여 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국가 지속가능개발 목표 수립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K-SDGs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정부는 지속기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기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지속기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속기능발전 목표 및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속기능발전법」 제3장에 따라 지속기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보급하며 견년마다 지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 기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9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K-SDGs 수립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지속기능성 제고 등 범정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법 체계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 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기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기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기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기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 ③ 지속기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기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기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기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지속기능발전법」 제3장 지속기능성 평가

제13조(지속기능발전지표 및 지속기능성 평가)

- ① 국가는 지속기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기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기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기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속기능성보고서)

-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기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기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기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지속기능발전위원회 역할

2000년에 설립된 지속기능발전위원회는 국가의 지속기능 발전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행계획의 협의 및 조정,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국가의 지속 기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기능성 평가, 지속기능발전 지식 및 정보의 보급 및 교육·홍보, 국내외 지속기능발전 협력, 지속기능발전관련 주요 정책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속기능발전위원회 현황

- 2000년~2006년(1~3기): 대통령직속 지속기능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 2006년~2008년(4기): 「지속기능발전 기본법」 공포, 제1차 지속기능발전계획(2006~2010)
- 2008년~2010년(5기): 「지속기능발전 기본법」으로 위원회 법적 근거 변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지속기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기능발전법'으로 변경)
- 2010년~2015년(6~7기): 제2차 지속기능발전계획(2011~2015)
- 2016년~2017년(8기): 제3차 지속기능발전계획(2016~2020)
- 2018년~(9기): 국가 지속기능발전목표(K-SDGs) 수립

UN SDGs 개요: 수립 및 이행

2012년 Rio+20에서 2015년 이후 전자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DGs 수립을 합의한 이후 2015년 9월 UN 특별정상회의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will be left behind)’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지구촌의 번영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표 수립의 주요한 원칙은 People(사람 중심), Planet(지구환경 보호), Prosperity(경제적 번영), Peace(평화와 인권), Partnership(파트너십)의 5P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며 2016년부터 15년간 목표 이행 활동이 추진된다. SDGs는 환경, 사회, 경제 부문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UN 경제사회 이사회(ECOSOC) 주관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SDGs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HLPF는 매년 각료급 회의, 4년 주기 정상급 회의로 개최되며 2019년은 정상급 회의가 개최되는 해이다.

SDGs 17대 목표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목표1부터 목표6은 사회 발전 영역으로 빈곤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8부터 목표11은 경제성장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환경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 사회**
- 1. 빈곤 퇴치
- 2. 기아 해소와 지속가능농업 발전
- 사회**
- 3. 보건 증진
- 사회**
-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사회**
-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 사회**
-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 환경**
- 7. 에너지 보급
- 경제**
-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 경제**
-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 경제**
- 10. 불평등 해소
- 경제**
-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 환경**
-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 환경**
- 13. 기후변화 대응
- 환경**
-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이용
- 환경**
-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이용
- 인프라**
-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 인프라**
- 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K-SDGs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체제

글로벌 지표연계구조

K-SDGs는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수립 과정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The Road to Dignity by 2030”에 따르면 국가의 지속 가능발전목표는 국내 기준 메커니즘과 프로세스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별 지표는 글로벌 지표와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단 각 국가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에 맞추어 지표의 개수와 속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행상황 보고체계

UN은 2017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주류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 지표체계에 맞추어 SDGs 이행상황의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상황을 충실히 진단하여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서 이행 계획의 달성을 나타내는 실적지표와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능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충실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진단을 통해 정책의 전환이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K-SDGs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상황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세밀히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구조



K-SDGs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참여현황

국내에서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국가 정책에 SDGs를 반영한 바 있으며 K-SDGs를 수립하고 지속가능개발 이행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언, SDGs, 이행, 진단 후속조치의 틀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SDGs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에 ODA 비전으로 SDGs 달성을 기여를 명시하였다. 또한 ODA 10대 분야와 SDGs 목표 및 성과지표를 연계하고 ODA 기관은 2016년부터 사업 시행계획 제출시 관련 개별 SDG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010년~2015년 기준으로 10.2%로 OECD DAC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ODA 규모는 192억 달러 규모로 14위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2016년 7월 개최된 HLPF를 주재하고, SDGs 챕터 이후 처음 실시된 자발적 국가별 평가 (VNR)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HLPF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 주제 하에서 물과 위생, 에너지, 도시와 거주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육상 생태계, 글로벌 파트너십 등 6개 SDGs에 대하여 세부 목표를 검토한 바 있다.

UN 고위급정치회담(HLPF) 대한민국 수석대표 연설문 中

[2018년 7월 17일]

작년 5월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언하고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다수의 혁신적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주당 근로시간 16시간 단축, 아동, 노인, 장애인 수당 인상 등은 'leave no one behind'라는 SDGs의 정신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조치들입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롭게 한국형 SDGs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금번 HLPF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주요 조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DG 6, 물과 위생의 문제입니다. 금년 6월에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수량-수질로 나누어 있던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DG 7, 에너지 문제입니다. 원자력은 2030년 까지 8기를 폐쇄하고, 석탄화력은 2022년까지 총 10기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탈핵,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에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에너지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문제입니다. 한국정부는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는 2030 국가 비전으로서 한국형 SDGs(K-SDGs)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3개의 부처와 42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UN의 MGoS 메커니즘을 정식 채용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행 단계에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2장 K-SDGs 비전 및 추진과정

K-SDGs 비전 :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포용국가는 現 정부의 사회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말한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 비전하에서 3대 비전, 9대 전략을 표기한 바 있으며 사회통합 강화 비전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전략,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의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은 K-SDGs(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비전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지구촌 협력강화 등 5대 전략 하에서 17개 목표를 수립하였다.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安心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 2018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구현

-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교육증진
-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구환경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기후변화 대응
- 해양생태계 보전
- 육상생태계 보전



번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성장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평화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 성평등 보장
- 불평등 해소
- 인권·정의·평화



파트너십

지구촌 협력강화

- 지구촌 협력 강화

K-SDGs 추진체계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태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

립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하였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다.



K-SDGs 수립과정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다.



민·관·학 공동작업반

구성

각 부처에서는 2018년 3월까지 작업반 참여 1차 추천을 받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 추가 참여 신청을 받아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공동작업반은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국책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14개의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중심으로 19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모두 포함할 경우 429명의 대규모 인원이 K-SDGs 수립에 참여하였다. 인원 배분의 원칙은 17개 목표별로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일부 연관성이 높은 목표는 하나의 작업반으로 통합하였다. 3개 작업반으로 통합된 6개의 목표는 SDGs 1(빈곤)과 SDGs 10(불평등), SDGs 8(경제성장·일자리)과 9(인프라), SDGs 7(에너지)과 13(기후변화) 등이다.



K-SDGs 민·관·학 작업반별 포럼 [5.15~11.30]

운영

공동작업반은 2018년 4월부터 운영되었으며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효율성을 위해 작업반별 반장을 두어 회의 일정, 안건 등을 조율하였다. 작업반장은 논의초안 마련, 회의 소집, 회의결과 정리 등 간사역할을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전문가로 하여 작업반 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반이 초안을 도출하면 민·관·학 작업반별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총 45회 포럼이 개최되었다. 작업반은 세부목표·지표·이행계획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는 절차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K-SDGs 국민대토론회 [6.21]/작업반 워크숍 [10.31]

2018년 7월 17일 개최된 HLPF에서 대한민국 수석대표는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함께 민·관·학 공동작업반과 K-MGoS를 통한 한국형 K-SDGs 수립과정을 소개하였다.

제6차 HLPF 대한민국 수석대표 연설 [7.17] ▶



K-SDGs 목표별 민·관·학 공동작업반 구성

목표	총계	빈곤 퇴치	농업 발전	보건 증진	교육	여성 역량 강화	물 위생 관리	기후 변화 대응	경제 성장	지속 가능 도시 구축	지속 가능 소비 생산 증진	해양 보존	육상 생태 계 보존	사회 제도 구축	글로 벌 파트 너쉽 강화
총계	192	8	10	10	18	10	11	28	18	11	21	11	12	11	13
민	87	4	4	6	8	3	5	14	8	7	10	3	5	5	5
관	72	3	3	3	7	6	4	10	5	2	10	6	5	2	6
학	33	1	3	1	3	1	2	4	5	2	1	2	2	4	2

이해관계자 그룹(K-MGoS)

구성

K-SDGs 이행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계층별 이해관계자 그룹(K-MGoS)을 구성·운영하여 K-SDGs 수립을 위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 1개월 동안 관심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국민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14개 그룹을 구성하였다. 최종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자, 산업, NGO,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육 및 학계, 장애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동물복지, 청년 그룹으로 확정되었으며 90개 기관의 대표와 42명의 국민 대표로 총132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K-MGoS는 UN-MGoS 플랫폼과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동물복지 등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동물복지 그룹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운영

작업반 구성이 완료된 이후 2018년 5월부터 K-MGoS가 운영되었다. 작업반에서 마련한 K-SDGs 보고서 초안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K-MGoS의 입장보고서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SDGs의 특징인 목표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별 논의구조를 추가하였다.



K-MGoS Kick-off (5.11)



K-MGoS 간담회 (11.20)

K-SDGS 전국 지역별 토론회



동남권(6.7)



서남권(6.8)



수도권(6.12)

이해관계자 그룹(K-MGoS) 구성

구분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자	산업	NGO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육·학계	장애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동물복지	청년	
총계	132	13	4	3	6	7	27	3	13	11	19	16	3	2	5
기관	90	8	3	3	3	7	17	3	4	4	17	12	2	2	5
국민	42	5	1	0	3	0	10	0	9	7	2	4	1	0	0

전 국민이 참여한 K-SDGs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제1차 국민 대토론회

환경부는 2018년 6월 7일에서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K-SDGs 수립 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각 지역별 토론 주제는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과 생태계', '지속 가능한 물·기후·에너지', '지속 가능한 평등권과 보건·인권'으로 특화하여 주제 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약 1천여명이 참여한 지역별 순회토론회가 종료된 후 2018년 6월 21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6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NGO, 노동, 농민, 산업, 동물 생태계, 여성, 지역공동체, 청년, 이주민 등 14개 K-MGoS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후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함께 K-SDGs 수립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분야별 K-SDGs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과정, 이해관계자그룹의 의견 반영계획 등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차 국민 대토론회 및 부대행사

제1차 대토론회에 이어 2018년 10월 제2차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총 4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는 K-SDGs 세부목표와 지표체계 수립과 함께 관계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계부처에서 작성한 K-SDGs 세부목표에 대한 목표치와 이행계획에 대하여 민·관·학 전문가 공동작업반과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별도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K-SDGs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슬로건 4개, 심벌마크 2개에 대한 현장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국민투표로 선정된 K-SDGs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K-SDGs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과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K-SDGs 인식도 제고를 위해 청년, 과학기술, 동물보호 등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국민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에는 약 40만명이 참여하여 14명의 홍보대사를 선정하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배우 홍경인, KBS 김재원アナ운서, 동물전문가 강형욱,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 배우 하석진이 참석하였다.



분야	홍보대사	분야	홍보대사
여성	수지	산업체	윤송이
청소년	갓세븐	과학기술	하석진
청년	옥택연	교육/학계	유시민
장애인	신의현	동물보호	강형욱
이주민	전철우	NGO	정우성
농민	최불암	지역공동체	김재원
노동자	홍경인	지방정부	박원숙

K-SDGs 수립은 작업반 429명, 이해관계자 그룹 132명, 지역별 순회토론회 1천여명, 상하반기 국민대토론회 1천여명, 대국민 설문조사 2천명이 참여하는 전국민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2회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토론과 함께 '쪽지(포스트잇) 의견수렴'도 진행되었다.



K-SDGs 대국민 인식도 조사

2018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의 1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SDG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비전공유 목표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인지여부' 대한 조사결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14.9%p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국민의 81.9%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인 지속가능발전포털에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K-SDGs 작업반 초안과 이해관계자 그룹의
입장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작업
반과 이해관계자그룹이 보고서를 업로드하면
국민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자연바 보고서 고으

이해관계자 의견 고으

제3장 K-SDGs 수립내용

K-SDGs 수립 및 의의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비전에 따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주민 그룹에 탈북자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성을 높였다.

이렇게 마련된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에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17개 목표로 구성된 UN-SDGs 와 달리 K-SDGs 16번(인권·평화)의 신규 세부목표인 ‘남북 간 평화구축’을 독립시켜 K-SDGs 18번 남북평화구축 목표로서 신설하자는 의견을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국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K-SDGs 수립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UN-SDGs 대비 지표 변동사항

제외지표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는 세부목표 및 지표는 제외되었는데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 지표의 경우 0.49%로 매우 낮고, 국민영양결핍 해소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가 고열량 섭취국가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또한 여성할례, 아와배변근절, 초국경 수자원 관리, 아동노동 극복, 백신에 대한 접근보장 등 지표는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외되었다.

추가지표

한국적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지표가 추가되었는데 만성 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통합적 수질관리, 플라스틱 대체 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지표이다. 그 외에는 인구고령화 대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하수도서비스 제공, 운송분야 대기오염 저감,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 기후변화 1.5°C 이내 달성, 생태축 복원 등의 지표가 추가되었다.

K-SDGs 운영계획

향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릴레이 포럼 개최, 비전공유 및 홍보, 지자체 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소통 창구와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K-SDGs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K-SDGs 주요 지표

분야	주요지표	2017년대비 2030 목표값 설정
사회	•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비율	36.8%* → 31.0%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65.9% → 85.5%
	• 노인 빈곤율	46.5% → 31.0%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4.3 → 11.9
	•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	0.52 → 0.22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24.0% → 44.0%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 4.6%
환경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74.3% → 90.0%
	• 갯벌 복원면적 [㎢]	0.2 → 6.0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4.9% → 10%
경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23%** → 4.29%
	•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51.6% → 52.9%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75.8%** → 95.4%
	• 친환경차 보급대수	9.7만대 → 880만대

* 2015년 대비, ** 2016년 대비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구성

지속가능 개발목표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목표* (신규)	122 (14)	4 (-)	5 (-)	9 (3)	10 (-)	7 (0)	7 (3)	4 (1)	7 (-)	5 (1)	5 (-)	8 (-)	11 (3)	4 (1)	8 (-)	8 (1)	14 (1)	7 (-)
지표* (신규)	218* (122)	8 (5)	11 (7)	18 (9)	27 (6)	9 (1)	14 (12)	7 (5)	11 (4)	8 (4)	10 (7)	19 (9)	20 (12)	6 (6)	14 (8)	13 (4)	14 (14)	9 (9)

* 중복지표 4개 포함



Goal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1. 빈곤율 감소

2006년 이후 전국 단위 자료를 통해 조사된 시장소득 빈곤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장 이전을 통한 대응을 늘려 가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빈곤 감소 효과는 약하며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인구별주별로 볼 때는 특히 노후소득보장의 미비에 따른 높은 노인빈곤,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 계층의 형성에 따른 근로빈곤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빈곤율은 비장애인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통해 상대빈곤율-중위 가처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을 2016년 기준 13.8%에서 203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층 중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1-2. 사회보장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실질적 보장 달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 틀을 완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존재하며, 제도의 지원 수준도 실질적 필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 사회보장제도는 포용성, 적정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빈곤 감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춰 가계직접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빈곤층 및 취약계층 의료 이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을 등 세부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2016년 33.3%인 가계직접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실직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는 임금대체율 및 지급기간이 짧아, 실업기간 5년 동안의 순소득대체율이 10.3%에 그쳐서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급여수준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1988년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장한 국민연금은 미래의 보장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가입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에 2017년 82.5%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1-3.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제공강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욕구 충족의 제약을 극복하고 미래 희망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사회서비스별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 보다는 각종 공적지원 체계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2015년 기준 10.1%인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지출의 각 항목-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공공부조의 영역별로 지출 수준의 구체적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7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9% 수준으로 2030년까지 4.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빈곤은 개인의 희망을 깎아내어 사회의 역동성을 감소시킨다.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긴급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일하는 이들의 희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령대 가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EITC)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적 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정부 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의 지출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참고. 극빈층 근절

2015년을 기준으로 일인당 월 가처분소득이 약 4만5천원* 수준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약 0.64% 수준이다.

* UN에서 정의한 극빈층 기준인 하루 \$1.25를 월 기준 원화로 환산한 값



Goal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2-1. 취약계층 식량접근성 보장

2008년 기아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세계인구 5명 중 1명(19%)이 지난 1년동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98%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비율을 신규지표로 반영하여 2016년 기준 95.8%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 농가 소득 다각화 및 경영 안정망 확충

농업소득의 증가가 한계가 달한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농가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 농가의 절대적 소득 수준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와 농가 소득의 실질적 감소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농어촌 가구 소득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정책에 기반하여 조직화를 통한 농업노동생산성 증대와 동시에 농업 소득 보전 정책의 보완, 농업연관산업의 육성, 농가소득원의 다각화 등 농촌에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신규지표로 포함된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은 2015년 기준 약 1,630만 원 수준에서 2030년 약 1,850만원으로 확대하며 농작물 재배보험 기입율은 2015년 기준 30.1%에서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1977년 주곡 자급률 달성을하고 식품 소비량 및 소비 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전체 식량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세계 식량 사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지의 타 용도 전환 및 유류농지의 증가 문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본이념으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생산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농지면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계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 범용화사업을 확대했으며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농지이용을 고도화 하여 남는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수입 곡물 수요를 대체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식생활교육 확대, 원산지표시제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식품소비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 농업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17년 기준 4.9%에서 2030년 10%로,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을 2.3%에서 2.4%로, 밭토양 산도를 6.3pH에서 6.4pH로 개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신규지표로 포함된 환경보전프로그램 및 기후변화대비 개발품종수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2-4. 유전적 다양성 유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편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전자원의 보전은 지속가능 농업의 출발점이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등에 의한 유전자원 독점을 방지하여 식량안보를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환경부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분산 관리중인 농업, 산림, 수산 유전자원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검색 및 분양 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종가가 쉽게 이용하도록 유전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K-SDGs에서는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를 2017년 약 29만건에서 2030년 32만 건으로 확대하되 신규지표로 포함된 토종종자 확보수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2-5. 식료품 시장 안정화 도모

우리나라는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특히 주곡인 쌀의 비축을 목표로 FAO 권장 기준에 맞춰 시기에 매입하는 공공비축 미곡과 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비축미를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보유량을 2017년 기준 186만톤에서 80만톤으로 감축하는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참고. 영양실조 종식

한국은 2015년 기준 1인 1일 권장열량을 2,036kcal에서 1,992kcal로 낮추어 설정할 정도로 영양 결핍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일부 고령자의 영양 결핍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SDGs의 측정지표에서 상정하고 있는 아동 영양 결핍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 목표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Goa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만성질환 위험관리 및 건강보장 확대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 준수와 함께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7년 기준 40.7%에서 2030년 29%로 낮추고 신규지표인 당뇨병 조절률을 2016년 기준 32.9%에서 2030년 36%로 개선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2017년 기준 55.6%에서 64%로,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을 81%에서 68%로 개선하여 장애인 건강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심혈관질환, 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향후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3-2. 정신건강 증진 및 약물오남용 예방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7년 24.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5년 단위의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자살예방기본계획'내 예방적 조치를 통하여 해당 수치를 2030년 11.9명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알코올소비량은 2017년 기준 8.7리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2030년 7.2리터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고의존비율을 신규지표로 반영하였고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3-3. 도로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5,505명에서 2015년 4,621명으로 5년간 16.1% 감소하였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약 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K-SDGs에서는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기준 0.08명에서 2030년 0.03명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강화하였다.

3-4.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우리나라의 감염성 질환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르러 많은 감염병이 퇴치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기준지표를 준용하여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을 2017년 기준 70명에서 2030년 18명으로 감축하고 천명당 말라리아 발병률은 0.17%에서 0.02%로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5. 모성의 건강 보호 및 증진

한국의 산모사망률은 2015년 기준 8.7명(10만 출생당)으로 OECD평균인 6.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 임신부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유럽국가들은 99% 이상이 숙련된 의료인력에 의해 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의료인력 숙련도 향상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통하여 출생아 만명당 산모사망률을 2016년 기준 0.84%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3-6. 아동의 건강 보호 및 증진

한국의 신생아 사망은 2014년 기준 출생 1,000명당 2.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4.0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6년 신생아 사망률은 1.6% 수준으로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2030년에는 1.4%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신규 지표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청소년 및 아동 비만 유병률을 주기하여 2016년 기준 13.3%를 유지하도록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3-7.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감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초과사망은 이미 연간 3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그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편서풍 지역에서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기오염물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자동차 및 산업시설 등의 자체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정체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1990년부터 2015년 까지 15,100명에서 18,200명으로 21% 증가하였으며 10만명당 사망자수는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인 22명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목표를 신규 지표로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목표치 설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3-8.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

본 목표는 국내 현황을 반영하여 3개의 신규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OECD 국가 중 29위 수준인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외에 추가된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노인 일자리 지표는 향후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3-9.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예방사업 및 필수의료정책에 의해 건강보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건강보장은 상대적으로 달성도가 높다. 최근 안정적 의료 서비스 니즈를 반영하여 공공 병상 수를 신규지표로 포함하였으나 향후 목표치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Goal 4. 교육의 증진

4-1. 양질의 초중등 교육이수 보장

2016년 기준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2.6%, 수학 4.9%로 낮은 수준이나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통해 이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국제수준에서 OECD PISA 2015 결과를 반영하여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기초 수준(2수준) 이상 학생 비율을 각 0.1%p 이상 높이고, IEA TIMSS 2015 결과 대비 수학, 과학, 영역 기초 수준 이상 학생 비율을 초·중학교 각각 0.1%p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중등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학습 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 결과를 산출하여 양질의 균형 잡힌 교육성과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2. 양질의 영유아 교육 보장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에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학 전 무상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투자도 확대하여 2014년 기준 GDP 대비 1% 규모에 도달하여 OECD 권장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 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사립기관의 질적 격차가 크다. 또한 만연한 취학 전 사교육으로 인하여 놀이시간 및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지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SDG의 신규지표로 반영된 0~5세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2017년 기준 58%에서 2030년 75%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24%에서 44%로 높이는 것을 목표 치로 설정하였다. 한편 긍정적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지표와 사회심리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 수준에 있는 5세 이하 비율지표는 측정도구 및 통계산출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4-3, 4-4.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보장

우리나라는 1999년 「평생교육법」을 공포한 후, 2000년 「평생 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각각 공포하여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평생 교육 참여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 취학률 및 상급학교 진학률로 미루어 볼 때 청년의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성인의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업 관련 학습참여율은 한국 2011년 기준 16.0%, OECD 평균 2007년 기준 28.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양질의 기술, 직업, 고등교육 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교육체제는 취약한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질의 훈련받은 인력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IMD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기업이나 노동시장에서는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도 심각한 편이어서 과학기술분야 등 특정 분야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 개편 등 시장 및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K-SDGs의 신규지표로 반영된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2017년 48%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고등교육기관의 비학위 교육 과정 참여율과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통계 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기준 35.8%에서 2030년 38.4%로,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은 16.1%에서 18%로 높이도록 하여 교육의 질적 측면과 지속성, 직업연계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4-5. 교육 차별 해소

국내 교육분야에서의 취약집단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 탈북민 학생, 장애인 학생,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사회경제적 문제로 교육이 결핍되어 있는 집단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해『도서·벽지 교육진흥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지만 취약집단의 교육 소외는 여전하다. 취약집단의 교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K-SDGs에서는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를 도입하고, 취약집단의 취학율과 학업중단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형평성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표의 통계산출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는 2017년 기준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을 1.32%에서 2030년 1%로 감소시키고, 탈북민 학생의 경우 2%에서 1.5%로 감소시킬 것을 목표하고 있다.

4-6. 문해 및 산술능력 강화

만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읽기와 수학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표로 목표설정을 하면서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PIAAC 지표를 적용하였다. PIAAC지표의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수준 1 이하 인구 비율을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성인문해율을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언어부문 2.2%에서 2.0%로, 수리부문 4.2%에서 4.0%로 설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에 대한 PIAAC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학력별, 성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행계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7.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의식 강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네스코학교'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발전교육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학습주제로 채택되어 교과내 통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소개하는 전략이 교육부 및 유네스코 아태국제아해교육원(APCEIU)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활용 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공교육 의무교육의 기본 역량과 연계한 교육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범주류 성격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학계-교육계-지역사회-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달성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정확한 통계조사 데이터가 없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측정도구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에 따른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역량 강화가 필요 하므로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을 확대 하되 2017년 기준 1,374명에서 2030년 8,000명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및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요소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4-8. 교육시설 및 포용적 학습환경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학교 내진보강률 지표를 반영하여 2022년 25%, 2030년 100%를 목표로 안전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 57.5%의 Wee 클래스 설치 비율을 100%로 높이도록 하였다. Wee 클래스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을 수행하는 'We Education + We Emotion'의 개념을 의미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에 대해서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4-9, 4-10. 양질 교육제공을 위한 재정 및 교사 확보

4-9 목표 관련 재정지표에서는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을 2017년 기준 1%에서 OECD 평균으로 높여 교육재정을 확보하도록 한다. 4-10 지표의 교육의 질적 지표로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를 2017년 기준 5.95명에서 지속감소시키며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을 66.9%에서 100%로,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을 61.7%에서 100%로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여 지속관리하여 교육 질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Goal 5. 성평등 보장

5-1, 5-7. 여성 대상 차별 철폐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이어왔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에 따르면 국가성평등지수는 2011년 67.4점에서 2015년 70.1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젠더 격차 지수의 순위는 전체 144개 국가 중 한국은 116위로서 하위권에 해당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의 순위가 123위로서 양성간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기준 60%의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을 2030년 75%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을 67.3%에서 83%로 높여 제도·예산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5-2. 여성 대상 폭력 철폐

정부는 그 동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 대상 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설문 응답자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성폭력범죄는 26,82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1.2건 발생하였다.

이는 2005년 23.7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1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성폭력범죄는 약 2.2배 증가한 상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가 성평등지수의 안전 분야 역시 2011년 보다 8.8점 하락하였다. 따라서 과거 추세를 근거로 최대로 달성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되 2017년 기준 33.2%의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대응률을 2030년 50% 수준으로, 3.8%의 성폭력 발생사건 미검거율을 3.3%로 개선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참고. 아동결혼 및 여성할례 근절

아동 결혼과 조혼 및 강제 결혼 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졌고 여성 생식기 질제와 같은 관습도 존재하지 않아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5-3. 가사노동의 존중 및 가치 부여

우리나라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에 따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내의 가정 관리 및 가족 돌보기 시간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사 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10~24세에 하루 평균 16분이었으나 25~39세가 되면 하루 평균 약4시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의 시간 활용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등한 성역할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지표를 수립하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통계산출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5-4.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공평한 기회 보장

2005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유리천장지수'는 2015년도 기준 한국이 25.6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여성 고용자 중 관리자에 해당하는 비중은 한국이 0.4%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되며 여성의 정치적인 역량 지표에서는 92위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K-SDGs 지표에 반영하여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을 2017년 수준인 10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5. 출생관련 건강 및 권리 접근 보편성 보장

산모사망률은 지역별 산부인과 여건하락에 따라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미혼모의 재생산 보건 및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 보건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되 통계산출 방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접근 확대

여성권리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지표로 공학계 여학생 비율을 추가하였으나 목표치가 결정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Goal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안전한 식수 공급

UN-JMP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안전한 식수 접근성은 97.6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K-SDGs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상수도 보급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여 각각 2017년 기준 96.4%, 72.8% 수준에서 향후 지속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6-2.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거의 100%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 하수도 보급률은 2014년 말 기준 92.5%로 높은 수준이나 농어촌 등 군단위 지역은 아직 65.9%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2017년 68.2%에서 2030년 85%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6-3.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

본 세부목표는 수질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배출 최소화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여 미처리된 하수를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하수 및 폐수는 거의 100%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K-SDGs의 지표들은 모두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은 2018년 8.0%에서 2030년 9.0%로, BOD기준 수질등급달성을 2017년 80.9%에서 85%로,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은 55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은 통계 산출방법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6-4. 물공급 안정화 및 수자원 효율화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1톤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00 m³의 용수가 소요된다. 취수율은 2015년 기준 33%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 스트레스 기준으로 보면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본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상수도 누수율은 2016년 10.6%에서 2030년 9.2%로, 물공급 안전율은 2017년 67.6%에서 98%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은 2016년 287L/일/인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저감할 계획이며 모든 지표들은 신규로 추가되었다.

6-5. 통합적 수질관리 이행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199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있던 물관리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낭비없는 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K-SDGs에서는 현재 관리가 가능한 기준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를 기초로 목표수질 달성을(목표수질 설정지점 대비 목표수질 달성지점 비율)을 신규로 추가하여 2022년 10% 수준에서 2030년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6-6.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환경부는 1987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11~'15)'을 통하여 훼손된 하천의 복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평가 결과 전국 하천의 960구간에서 최상은 15.4%, 양호는 51.6%, 보통 29.8%, 불량은 3.2%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는 이·치수 중심의 관리로 하천 생태계의 종적·형적 연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3,582 개 하천의 34,012개의 보 중 어도는 5,081개로 어도 설치율은 14.9%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하구 중 49%에 하굿둑이 건설되어 기수역의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수변육상생물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하천 유속 감소, 우점종 변화 등 변화된 물환경 여건에 맞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K-SDGs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율 지표를 2017년 70.8%에서 지속확대하도록 하며, 신규지표로 포함된 수질 '좋음' 등급 비율은 2017년 80.9%에서 2030년 85%로 높이도록 하였다.

6-7. 지역공동체 참여 지원 및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을 목표에 포함하여 2017년 100% 수준의 협의체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Goal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 안정성 및 접근 보장

한국의 전기접근성은 이미 100%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나 저개발국의 경우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을 중요시하나, 한국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나 섬까지도 거의 모든 지역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국내 가구의 대부분(95% 이상)이 취사 및 난방에 천연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여건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겨울 난방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급 가구수를 신규 지표로 포함하여 2017년 기준 54.6만호에서 100만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7-2.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06%로 OECD 평균 9.17%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4년 26,882GWh에서 2015년 37,079GWh로 37.93%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포함한 총발전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2014년 4.92%에서 2015년 6.61%로 1.69%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14년 대비 수력(5.0%에서 3.4%), 바이오에너지(24.5%에서 20.8%)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태양광(4.7%에서 6.4%) 발전은 급증하였으며 폐기물(59.8%에서 63.5%), 지열(0.9%에서 1.0%) 등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비중의 경우 태양광은 신규설치용량(1,134MW) 증가로 발전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력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5.8%로 발전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어 이와 연계하여 수립되었다.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2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기준 5.0%에서 2030년 13.6%로 확대하도록 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청정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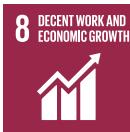
7-3.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0.22 toe/천\$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11 toe/천\$보다 높은 편이다. 에너지신산업 부문 투자액은 2015년 5.6조원(공공 4.8조원, 민간 0.8조원)에서 2016년 7.8조원(공공 6.2조원, 민간 1.6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6대 사업모델 중 전력 수요 관리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ESS 보급 및 수요관리 사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중이다. K-SDGs에는 건물에너지 관리정책을 반영하여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와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m²·년)를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그러나 현재 목표치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구체적 목표수립이 필요하다.

7-4. 운송분야 에너지 소비 최소화

본 세부목표는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목표이며 운송 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포함된 친환경차 보급대수 지표의 경우 2017년 기준 9.7만대 수준으로 2030년에는 880만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연관하여 친환경버스 보급 대수도 신규 지표로 포함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Goal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 모두가 행복한 경제 성장

2017년도 기준 한국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3.1%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내수 증가세둔화, 수출부진,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의 증가세둔화 등 경제성장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SDGs에서는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경제 성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에는 요소투입 주도 성장에서 종교소생산성 향상 주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기능과 경쟁 확대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요자 중심 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들이 빠른 환경 변화에 경영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8-2, 8-4.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17년 기준 50.8%로 70% 이상을 나타내는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남녀 고용율의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5년 37.2%로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이 높지 않는 등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고용률을 대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목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UN 지표를 준용하여 2017년 기준 56.9%의 여성 고용률을 2030년 63.9%로 높이고 남성대비 여성급여의 수준도 65.9%에서 85.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8-3.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환경훼손 억제

환경부는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원·에너지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대한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비의 물질 발자국은 최종 소비를 총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일차적인 자원량을 나타내는데 자원과 관련된 삶의 질, 혹은 경제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의 전체 물질 발자국 수준은 2010년 기준 1,125MT로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및 GDP당 물질 발자국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질 발자국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정하나 지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통계 산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은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채취(생산)되는 자원총량에 순수입량을 합하여 계산하고 있다.

국내의 DMC 수준은 2010년 기준 749MT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물질 발자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및 GDP당 DMC는 각각 2010년 기준 각각 15.45MT, 0.68Kg으로 주요국들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SDGs에서는 총량 관점에서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자원 소비량을 2016년 6.63억톤에서 2030년 6.84억톤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참고. 아동노동 근절

한국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이는 의무교육제도의 발전과 아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기에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SDGs의 지표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취약고용 지대로의 진입 증대에 비하여 노동기본권에 대한 온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청소년 취약 고용 수준을 새로운 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8-5. 청년 고용률 증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공무원 시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15~29세의 청년 고용은 2000년대 초반 증가세를 보이다가 후반기 이후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2.9%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지속적인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구조적 양상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K-SDGs에서는 청년고용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되, 2021년 2.3%를 달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으나 이후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설정된 지표관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과도한 경쟁 속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개인의 부담이 큰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미스매치 양상을 균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직업훈련, 진로가이드, 고용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경로구축이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 역시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여 적절한 처우를 받는 일자리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 청년고용 의무제

청년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2016년에 2년 연장된 바 있다. 2018년 12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5년 연장의 결과 함께 청년고용 의무제도가 3년 연장됨에 따라 2021년까지 해당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이행률 관리를 요구된다.

8-6.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과 아웃소싱의 활성화 속에서 취약한 근로계층의 증대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직이나 하청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은 노동불평등의 또 다른 심각한 양상이다. 아주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권익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향유되고 있지 못한 권리이다. 한국은 ILO결사의 자유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며 노조조직률이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K-SDGs에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지표로 사고성 사망인율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표에 대하여 2017년 기준 0.52‰에서 2030년 0.2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표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7.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한국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러다임과 함께 10YFP(10 Years Framework of Programmes)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및 모로코와 함께 공동 부의장국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K-SDGs 수립 과정에서 부처 내부 검토 및 UNWTO 회원국 분석 연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체 GDP 중 관광분야의 기여율을 2022년 3%, 2030년 5%로 높이고,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일자리 비중을 2022년 65%, 2030년 6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고. 사고사망인율

사고성 사망인율은 사고 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사고로 인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재해자를 포함한 원산재해율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부상자 및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고성 사망인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사고성 사망인율은 2015년 기준 독일과 일본의 세 배가 넘는 0.5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Goal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9-1.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접근성

본 세부목표는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로 개도국에 적합한 지표로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수준 이상을 충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도로 보급률 지표를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13km/천명 수준에서 2030년 2.16km/천명으로 도로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비율을 신규지표로 포함하고 2017년 91%에서 2030년 97.4%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을 지표로 반영하였으나 향후 통계 산출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9-2. 소규모 산업체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충분히 진전되어 있고 제조업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국내 중소기업의 재정안정성이 취약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문제 자체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반영하여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을 지표로 포함하였으나 이후 통계 산출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9-3. 기술 역량 구축 및 고도화된 기술상용화 촉진

UN-SDGs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상황에서 경제 성장 강화에 중요한 기술 역량 구축과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 촉진 목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2017년 51.6%에서 2030년 52.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9-4. 국가연구인력 및 자본확대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Full Time Equivalent, FTE) 연구원수는 2016년 기준 361,292 명이며, 인구 천명당 FTE 연구원수는 7.1명으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4.23%로 세계 1위 이스라엘 4.25%에 이어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향후에는 해당 지표를 3년마다 0.01%를 증가시켜 2030년 4.29%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9-5. 환경친화적인 산업활동과 기술혁신

산업활동은 자원사용,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동반되며, 이 중 다른 목표에 포함된 오염물질 지표를 제외하고 기후변화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과 고갈 가능성성이 우려되는 자원사용 관련 지표를 본 세부목표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기준 0.25CO₂/GDP이며 전세계 0.34CO₂/GDP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여 향후 기준 지표를 다시 개발할 예정이다. 신규 지표로 포함된 자원 관련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내 자원생산성은 2016년 기준 2.27GDP/DMC에서 2030년 3.03GDP/DMC로, 자원강도는 0.44DMC/GDP에서 0.33DMC/GDP로 효율성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참고, 국내물질소비량

(DMC: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하고, 국내 환경에서 채취(생산)되는 자원총량에 순수입량(수입량-수출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Goal 10. 불평등 해소

10-1. 저소득층 소득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전체 가구연평균 소득증가율 1.8%에 비해 하위 40% 집단의 1인당 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훨씬 낮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정책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제도와『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등 공공부조제도, 근로장려금(EITC) 등 보조금 제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정책 수단별 목표를 종합하여, 소득하위 집단 대상의 소득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지표로 하위 소득계층의 빈곤선 대비 소득 부족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격차비율을 추가하였으며, 2017년 36.8%인 소득격차 비율을 OECD 평균을 고려하여 2030년 31%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의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및 이주민 여부를 고려하여 생산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10-2.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성 확대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늘어났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소득인 만큼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을 2017년 5.1배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대적 빈곤 아래 살고 있는 가구원은 2011년 15.2%였으나, 2015년 13.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의 경우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 취약한 상황이다. 각각의 인구집단별 빈곤을 축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2017년 46.5%인 노인빈곤율을 기초연금 상향조정, 국민연금 성숙,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2/3 수준으로 줄인 31%까지 낮추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불평등 축소 만큼이나 자산의 불평등의 축소도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한 향점이다. 소득 하위 가구(1분위)의 순자산 총합이 전체 가구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7.5%에 그치고 있는 바,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10-3. 차별적 대우 철폐 및 공평한 기회 제공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집단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취업여부는 소득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중요한 사회 참여의 형태이므로 각 집단의 고용율을 증진시키고 집단간 고용율의 격차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을 줄여서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18년 49.4%인 55세 이상 고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여성고용률은 미세한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50.8%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전반적인 사회활동 영역(학교·직장·지역사회생활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고용·이동상의 문제·교육기회 등에서 제약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7년 36.5%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들의 고용 및 소득수준은 내국인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조사결과 고용률은 양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민의 경우에는 고용률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수준에 대한 구체적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관련 국내 법률로는『대한민국 헌법』제11조 제1항,『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1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은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7년 3.29점인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하여 2030년까지 3.6점으로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0-4. 재정 및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강화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념은 노동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더 높은 평등수준을 위한 재정 및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에 따라 1995년 69.6%였던 이 비율은 2007년에는 64.2%, 2013년에는 64.3%로 낮아졌다. 노동소득 분배율, 2차 소득분배 및 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 등을 포함한 GDP 대비 가계소득을 단일 신규 지표로 포함하였으나, 구체적 측정방식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10-5. 안정적인 이주정책의 이행

우리나라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민자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적합한 통계치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규 지표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와 이주민 건강관리지원을 포함하여 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참고.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5분위 배율은 최하위 1~2분위(10분위 중) 소득 대비 9~10분위 소득의 비율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약간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고령화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가계소득은 노동소득, 자본소득의 본원소득과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따른 세금, 사회부담금 및 사회수혜금의 2차 소득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5년 52.7%에서 2007년 50.6%, 2013년 50.7%를 보였으며, OECD 국가 평균적 감소하는 비율보다 감소폭이 크다. 여러 나라들은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2차 소득을 늘려서 가계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2차 소득 지출이 1995년 대비 2013년 1.02%p의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Goal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주택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한국은 주택의 양적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불량주거지역 개선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6년 16.6%에서 매 2년간 2~3% 가량 감소 추세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이다. 2014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총 가구의 5.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세부목표의 지표들은 모두 신규 지표이다. '18~'22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는 2022년 65만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22년 135.8만호, 주거급여 수급재정은 2022년 1.9조원 확보하고, 이들 수치들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11-2. 저렴한 교통시스템 구축 및 대중교통 확대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1년 47.3%에서 2014년 48.4%로 약 1.1%p 상승하였다. 반면, 지방대도시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1년 38.9%에서 2014년 28%로 약 10.9%p 가량 하락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지표는 종합적 관점에서 2017년 기준 31.3% 보다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신규지표로 포함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17년 기준 22.4%에서 2030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지표로 포함된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17년 1.43%에서 1.52%로, 자전거 도로연장은 0.41m/인에서 0.55m/인으로 각각 개선하는 것을 2030년 목표로 삼았다.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우리나라 전국 인구는 2015년 기준 5.1천만명으로 2006년 대비 6.93%가 증가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 비율인 도시화율은 91.79%로, 2006년 90.29%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도시지역의 면적은 2006년 17,043㎢에서 17,614㎢로 증가하였다.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공간의 질 저하,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 내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을 저해하고 있다. 도시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밀접한 시민참여, 자원절약적 토지이용 관련 지표를 신규로 제시하였다. 2017년 수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연구에서 제시된 2017년 41.8%인 시가지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과 1.74%인 도시계획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을 2030년 각각 49.3% 및 1.87%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11-4. 세계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은 관광매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화 및 자연의 보호와 관리는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관리 부문에 대한 지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예산 규모에 근거하여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와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을 지표로 포함하되 향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11-5. 재난 피해 감소 및 위기관리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자연재해는 증가 추세이고, 불확실성이 커서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 건축물 등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에 약 8.6배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78%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피해발생시 여전히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 하천, 사방 등 공공시설 피해액 및 복구액은 이상기후로 인한 전체 피해액(2013년, 1,720억 원)의 87%, 피해 복구액(2004~2013년, 15.1조원)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 주요 국가시설의 25~28%는 범람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안 시설 기준강화 및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는 국내산업 비중은 GDP의 52%로 미국 42%보다 높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반영토록 의무화하였다. 재해의 대형화, 복합화에 대응하여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를 2017년 0.2명에서 지속 감소시키도록 한다. 또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비율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지자체

의 도시계획 수립시 조기 반영을 유도하여 2017년 8% 수준에서 2030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을 신규지표로 포함하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11-6. 도시 환경영향 감소

1995년 환경기준 도입 이후 최근 10여 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 추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 전국 $26\mu\text{g}/\text{m}^3$, 서울 $23\mu\text{g}/\text{m}^3$ 으로 WHO 권고기준($10\mu\text{g}/\text{m}^3$) 및 선진국 주요도시(도쿄 $16\mu\text{g}/\text{m}^3$, 런던 $15\mu\text{g}/\text{m}^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량배출사업장 자발적 협약,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개선도는 높은 편이며 2016년 6월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시 환경영향의 주요한 요인인 폐기물의 경우 2015년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일 404,812톤으로, 2016년도에는 약 4.2%가 증가하였다. 국내 총생산대비 폐기물 발생량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16년 기준 연간 95.5톤/십억원에서 2030년 70.8톤/십억원으로 약 25.9% 감소시킬 계획이다.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지표로 포함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11-7. 안전한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용이한 접근 보장

공공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녹지형 공공공간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로 구분되어 시설수와 면적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원을 제외하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원은 2009년 17,616개, $1,111.6\text{ km}^2$ 규모에서 2015년 21,766개, 934.2 km^2 로 시설수는 증가하였으나 면적이 감소하였다. 특히 도보로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요자 맞춤형 공공공간 확보 및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분포에 따른 맞춤형 공공공간 확보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2017년 9.6 m^2 에서 2030년 11.6 m^2 로 확대하되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보도면적 비율,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에 대해서는 통계 산출 방법을 개발한 이후 목표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11-8. 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국토 및 도시정책에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후, 2002년 제정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토·도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도시화율이 90%를 상회하면서 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2010년대에는 중·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호 연계는 2015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2016년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2018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통합관리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지표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를 제시하였고, 2030년 지자체 수 100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2-1. 지속가능소비·생산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국내 관련법은 최상위법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으며, 관련 법률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인 기반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외 관련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제3차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친환경 소비 실천기반 확대 및 녹색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K-SDGs 지표로는 순환경 경관점에서 지속가능 소비·생산과 관련이 높은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를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2017년 1건에서 2030년 18건으로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도 신규지표로 반영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12-2. 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및 효율적 사용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년~2027년)'이 마련되었으며, 본 계획에서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핵심전략으로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과정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자원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자원 전과정에 대한 자원효율 지표 분석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되고, 국가·산업계의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국내 자원 소비량을 지표로 포함하여 2016년 기준 6.63억톤에서 2030년 6.84억톤으로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물질발자국의 통계 산출 방법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12-3. 식품 전주기적 손실 감소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3억 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손실되고 있는데, 이는 식량 생산량의 1/3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 감량목표를 50%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2006년 13,372톤에서 2015년 14,220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통해 도출된 식품 폐기물 지표(kg/인·일)를 신규 목표 지표로 포함하고 2016년 기준 0.37에서 2030년 0.34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식품 손실 지표의 통계 산출방법을 새로 개발하여 생산, 유통, 폐기과정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12-4.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친환경적 관리

2006년 국제사회에서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자발적 규범으로 채택한 이후 Post 2020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화학물질 생산·소비국으로서 납 사용량 세계3위, 카드뮴 생산량 세계1위 등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등 사회적 이슈를 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2019년 시행 목표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에 대한 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K-SDGs에서는 종량관점의 최종성과지표로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하여 2016년 기준 0.098 kg/인·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과 사고대비 화학물질수를 신규 지표로 포함하여 각각 2017년 기준 960개, 97개에서 2030년 2,510개, 1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12-5. 폐기물 발생 감소

국내 생활폐기물은 2014년 기준 재활용되는 물질회수율이 59%에 달해 OECD 평균(34%)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0.95kg/일/인으로 독일(1.70kg/일/인), 프랑스(1.39kg/일/인), 영국(1.34kg/일/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이러한 성과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자원순환목표가 포함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16년 기준 59.6%에서 2030년 83.8%로 높이고, 신규지표인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75.8%에서 95.4%로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2-6.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활동 관리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의무화하는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6년 말부터는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시스템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의 지속가능보고서는 2003년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발간기관이 100여개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연간 약 120여개가 발간되고 있다. K-SDGs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을 지표로 포함하여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촉진하되 목표치는 향후 설정될 예정이다.

12-7. 녹색제품 인증 및 녹색구매 확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대표하는 정책으로는 녹색공공조달이 있으며, 한국은 최근 지속가능 공공조달 정책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41개 국가 중 하나로 지속가능공구매 정책체계, 이행 및 모니터링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녹색구매는 2005년 도입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한 녹색제품구매 실적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16~‘20)」 수립을 통해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와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2017년 기준 35.2% 수준의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을 2030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간단계인 2020년에는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60%를 달성하도록 한다. 신규지표로는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를 포함하여 녹색구매 확대를 유도 하되, 2017년 기준 59건 규모를 2030년 73건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12-8. 지속가능 발전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확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환경부의 지원으로 2006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이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 이후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2010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교육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주도, 서울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들은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KOICA ODA 교육원에서도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신규 지표로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을 포함하여 2017년 기준 5.98%에서 10%로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지표도 신규로 추가하여 2013년 기준 65.5점에서 75점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12-9.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

본 세부목표는 UN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규 목표로 최근 국내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이 선순환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목표를 수립하였다. 신규지표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이다. 향후 통계 산출방법이 개발된다면 구체적인 목표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정 방법론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및 유엔환경계획(UNEP)은 관광분야 「10YFP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세부사업」에서 정책 평가지표를 포함시키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탄소·생태발자국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통계 산출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12-11.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국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면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화석연료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는 국내 생산 무연탄(연탄)이며 연탄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석탄생산 안정지원금은 2011년부터 예산지급을 중단했으며 연탄제조비 지원금은 2020년까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폐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을 지표로 포함하였으나 목표치는 향후에 확정될 계획이다.



Goal 13. 기후변화 대응

13-1.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적응능력 강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포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역 재난 위험감소 전략'과 관련하여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한 이후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난연보와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역별·원인별 인명피해와 피해액, 피해복구비 등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를 통합하는 대표지표 개선율은 2017년 기준 16.2% 수준이었으며 2030년 68%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13-2. 기후변화 조치계획의 정책반영 노력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정책에 통합하려는 노력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 기본법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적응대책 등 분산된 정책분야를 기후변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2016년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기후변화 대응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관 부처가 감축정책을 이행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가결 준비과정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K-SDGs에서는 기후변화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신규지표로 반영하였다. 첫째, '재생에너지 2020 이행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둘째,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는 25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셋째, 친환경자동차는 9.7만대에서 880만대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3-3. 기후변화 교육 강화

기후변화 관련 학교교육은 환경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교육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1995년부터 중학교에서는 '환경'을 독립교과로 개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5년 전국 3,227개 중학교 중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221개교로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고등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독립교과인 '환경과학'을 개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5년 전국 2,342개 고등학교 중에서 '환경' 과목 선택 학교는 300개교로 전체의 12.8%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 교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선도하고 전파하는 그린리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5년 말 32만 여명의 리더를 양성하였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37만가구)과 기후변화교육(177만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인지도 확대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인지도에 비하여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는 낮은 상황으로 본 세부목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를 신규지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63.2%의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수준을 2030년에는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13-4.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15년 국제적 합의를 통해 체결한 파리협약에서는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국제 협약에 기반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였으며, 2016년 기준 694MtCO₂의 배출량을 2030년 608~574 MtCO₂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Goal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해양오염 관리체계 구축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지속적인 연안 개발 압력으로 인해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부하 및 오염해역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에서는 연안오염도, 갯벌면적 증감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안오염도는 동서남해 모두 증감이 있으나 다소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신규지표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계 기반 해역별 해수질 기준달성을과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포함하였다. 2017년 기준 각 지표값인 8.18%, 8.2만톤 수치를 기준으로 2030년에는 수질 기준 달성을 100%, 해양쓰레기 10만톤 수거로 목표를 잡았다.

14-2.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해양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하여 해역별 보전가치와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해역을 대상으로 총 1,882km²의 환경보전해역이 지정되어 있다. 2017년 기준 바다숲은 15,252ha 면적이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면적을 고려하여 54,000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규지표로 포함하였다. 또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19~'23)의 5년간 복원목표를 기반으로 갯벌복원면적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2017년 0.2km² 규모에서 2030년 6km²로 확대할 계획이다.

14-3. 해양 산성화 최소화

해양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나 수온 상승과 같은 전지구적인 영향도 받지만 빙산소 수괴의 발생이나 하천수의 유입정도 등 지역적인 영향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산성화의 변화 정도와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화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수소이온농도의 적정기준은 pH 6.5~8.5로 설정되어 있으며 육상으로부터 영향이 적은 서귀포 일원의 수치는 pH 8.2로 유지되고 있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복합적인 원인보다는 최종지표인 연안 평균 pH 농도를 목표지표로 포함하고 2017년 기준 pH 8.1 수준을 해양환경기준에 따라 2030년 pH 8.1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4-4, 14-6, 14-8. 지속가능 수산자원 및 이용

수온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의 종류나 규모의 변동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해외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및 남획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TAC는 어종을 정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며 2017년 기준 11종의 어종을 지정했다. 국내 어업과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2030년에는 TAC 대상 어종수를 20개로 확대하고 동시에 2017년 기준 25%의 TAC를 2030년 7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수산자원에 맞는 적정 어선규모를 위해 설정한 감척 어선 수를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2017년 291척에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1,20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지원을 위해 신규지표로 어가 소득과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표를 포함하여 2017년 기준 각각 4.9천만원, 82.3%를 2030년 기준 8천만원, 87.5%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규모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고려하여 2017년 3% 수준의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을 2030년 20%로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충족' 계획을 반영하여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는 55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14-5. 연안 및 해양의 보호구역 설정

국내 해역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영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6.3%, 관할해역을 기준으로 하면 1.2% 수준에 불과하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신두리 사구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2017년 총 28개소를 지정했으며 2030년 39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지표로 포함하였다.

14-7. 해양과학 연구개발 확대

해양과학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신규지표로 반영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18)에 따라 2018년 3.1%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선진국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에 근접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Goal 15. 육상생태계 보전

15-1, 15-4. 육상 생태계 보존 및 복원 활성화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 「자원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육상생태계 보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K-SDGs의 15-1목표에서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9~'23)'에 따라 육상 보호지역비율 17%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또한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을 63.05%에서 지속확대하도록 하였다. 신규지표로 포함된 산녹색보호지수에 대해서는 향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15-4 목표의 식물다양성 손실예방 지표와 관련해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에 기반하여 2017년 74.3%에서 지속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15-2. 산림파괴 중지 및 황폐화 산림복원

1990년대초 산림경영의 기본이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채택한 이후 사유림을 포함한 모든 산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영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산림의 생장량 저하,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 감소, 지속가능한 생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산림경영 지표를 반영하여 2017년 36건에서 2030년 54건으로 관리 지표 건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15-3.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산사태 및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온대지역에 속해 복원 속도가 빠르고 피해 면적이 크지 않다. 하지만 토지황폐화는 도시개발, 농업, 임업 등 전반적인 토지이용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양 황폐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로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있고 지역자원에서 토양보전대책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토양 오염수준과 관련하여 2014년 기준 전국 2,460개 지점 중 65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만톤 이상의 미수거된 폐비닐이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국내 폐기물 매립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을 K-SDGs 지표로 포함하여 향후 통계산출 방법을 개발하고 황폐화 방지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다.

15-5. 유전자원 활용이익 공유

2018년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승인을 받고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ABS)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이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ABSCH(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가 정보 등록 및 간신 건수 지표를 포함하였고, 2022년 10건 수준을 2030년 30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5-6. 동식물 보호종 포획 및 밀거래 단속

밀렵 및 밀거래 방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빙자 밀렵차단을 위한 규칙」, 「맹견밀렵자 퇴출을 위한 미수범 처벌법」, 「수렵 동물의 적정이용을 위한 처벌법」 등이 있다. 최근 단속건수가 90% 이상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자의 이탈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맹견 밀렵도 여전하다. 따라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실적을 지표로 포함하고 2017년 168건의 단속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5-7. 유해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유해외래종 유입 관리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의 '국가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유입가능성이 높은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자국 유입 시 피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련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대비 56%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20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종 1,000종을 지정하여 사전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을 26,230ha에서 25,000ha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포함하였다.

15-8. 생태층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산줄기를 의미하며 국내 생태계보전지역을 다수 포함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이다. K-SDGs에서는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 계획('18~'22)'을 참고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면적을 신규지표로 포함하고 2017년 기준 315ha의 산림복원면적을 2030년 7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생활권 등 기타지역 복원계획'을 반영한 도심/생활권 복원면적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150ha 면적을 500ha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Goal 16. 인권 · 정의 · 평화

16-1. 폭력 및 폭력 사망률 감소

2015년 기준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36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피해자수는 60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 근절을 위하여 여성청소년 전담수사팀을 전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성폭력 대책 계획을 성폭력대책과로 확대하는 등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5대 범죄 검거율은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본 목표에서는 2017년 78.8% 수준의 검거율을 지속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16-2. 아동폭력 종식

정부는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등 아동에 대한 착취와 폭력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법률 및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아동폭력 발견율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K-SDGs에 포함하여 2017년 2.51%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6-3, 16-6. 법치증진 및 정의보장, 책임감 있는 제도

기본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여전히 실제 운용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적절한 당국 혹은 기타 공식 분쟁해결수단을 통하여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0.07%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은 2014년 연말기준 34.7% 수준이다. 본 세부목표의 대표지표로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수립과 이행에 대하여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및 만족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16-4. 불법자금, 무기 거래의 감소, 조직범죄의 퇴치

조직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배후에 유통되는 자금 및 무기거래를 추적하여 그 순환을 끊어내는 등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을 관리지표로 포함하고 향후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16-5.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결과 대한민국은 2014년 기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체 175개국 중 43위로 낮은 편이다. 1953년 국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이 있으나 그 동안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패 반발 분야와 관련한 청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도록 하는 청탁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K-SDGs에서는 국가청렴지수를 목표지표로 포함하였으나 우선적으로 통계 산출방법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민권익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16-7, 16-9. 대중의 정보 접근권 보장

국민의 정보 접근성 지표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691,96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하였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과 비교할 때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2년 이후 정보 공개율은 95% 이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K-SDGs는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과 함께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를 지표로 포함하여 향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16-8. 출생시 법적 지위 부여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를 수립하고 향후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16-10. 개도국내 범죄퇴치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를 목표지표로 포함하고 향후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16-11. 차별지양 법·정책 수립 및 이행

우리나라는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성차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 여성, 장애인, 외국인, 복지, 언론, 교육 등 각 부문별 법적 기반을 근거로 차별 대우 금지, 고용촉진 지원, 방송 공정성 및 공익성, 교육기회 균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및 이행여부를 지표로 포함하였다. 동시에 차별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위원회 권고안 이행지표를 포함하여 정성 적으로 실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16-12. 디지털 인권보호 강화

2013년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디지털 통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관행,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2017년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이버폭력 건수를 지표로 포함하여 이후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16-13. 남북한 협력 증진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중이면서 동시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정치 및 외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신규지표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 증진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표와 목표치는 향후에 수립될 예정이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Goal 17. 지구촌 협력 강화

17-1. 개도국에 대한 원조규모 확대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여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정책 일관성, 원조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K-SDGs 이행지표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 2020)'의 재원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2017년 0.14% 수준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2030년까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7-2. 개도국 교역 및 투자증대 지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각 국가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위해 공정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최빈국 무관세조치 확대와 개도국 시장접근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K-SDGs에서는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지표를 포함하여 향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17-3.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지원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STI)이 중요하며 개도국의 경우 성장기반 확충과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역량 강화가 특히 중요하다. 기후변화 등 전지국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기술이전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지표 확정이 필요하다.

17-4. 개도국의 국가계획 역량 지원강화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수립과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 스스로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경험과 정책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왔다. 향후에도 적정한 지식공유사업과 기술협력사업, 정책컨설팅을 통해 개도국의 SDGs 이행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가 필요하다.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K-SDGs는 목표의 포괄성과 상호연계성이 높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에서 집행 및 환류까지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DAC의 2008년 특별평가와 2012년 동료평가에서 연속으로 '정책일관성 추진'을 권고 받은바 있으며 개발공헌도지수(CDI)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K-SDGs의 이행지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 조정건수와 함께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17-6.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분야와 주체가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파트너십 활용하여 전문성과 경험,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분야가 세분화되고 참여주체가 늘어나면서 SDG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 K-SDGs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행지표를 추가지표로 반영하고 향후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17-7.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K-SDGs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 기업 및 산업체, 지방자치기관 등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 및 지역단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른 민관협력사업을 통하여 국가 책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지원,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등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주요 지표로는 K-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를 설정하되 향후 목표치를 수립할 계획이다.

제4장 K-SDGs 운영 계획

K-SDGs 추진 거버넌스 구축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속 조정 등 위상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발전기본계획 심의,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권고,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산업에 특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기반마련 검토방향(안)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의 변경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정부는 …(중략)…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운영

-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 ①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K-SDGs 지표별 보완방향

현재까지 수립된 전체 214개 지표 중 26개 신규지표는 2019년 내에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한 이후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개발, 장애인 등 취학률, 가사노동 시간비율, 물질발자국,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보도면적 비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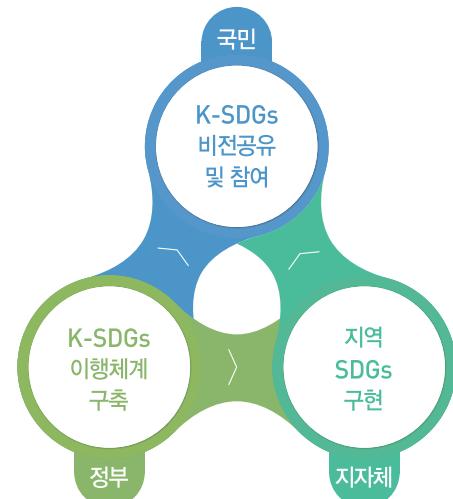
그 외에 목표치가 확정되지 않은 45개 지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30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국가에너지효율지표, 가계소득, 치매안심센터 개소, GNI 대비 ODA 비율 등이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K-SDGs 지표 및 세부목표는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K-SDGs 관리방향



K-SDGs 통합적 추진



K-SDGs 모니터링·평가 방법론 확립

K-SDGs는 '제3차 지속기능발전 기본계획' 목표체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지속기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지속기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통계산출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지표 중 기존 통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합을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부터 국가통계포털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외의 지표는 지속기능발전위원회와 통계청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지표를 계량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방법론이 확립되면 2020년도에 K-SDGs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5년마다 국가 지속기능발전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외 지속기능발전 환경 변화에 따라 부처별 기본정책 방향 변경 등 보완 필요성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지표 및 이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까지 '지속기능발전목표(SDGs) 국제적 이행평가 체계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UN SDSN, OECD 등 국제기구,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이행평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여론을 통한 비전 공유 및 홍보

K-SDGs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K-SDGs 홍보를 촉진하여 이행계획 추진시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K-SDGs 로고 및 슬로건 개발, 환경부장관과 지속기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저명인사 기고문 보도, 홍보자료 배포, 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영상제작, 국제행사 개최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K-SDGs 달성을 위한 비전공유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K-SDGs 이행을 위한 환류체계

K-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주류와 연계하여 강력한 구현 방법 및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률 및 종장기 행정 계획을 위한 지속기능발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 K-SDGs와 관련된 정책은 일관성의 원칙(포함, 일관성, 기증치 부여, 보고, 지원)을 반영하여 목표달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고, 매 2년마다 달성을 공개하며 국가 지속기능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류체계를 통한 목표 달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기능발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국가수준으로 통합하고 지속기능발전 기본법 등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기능발전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K-SDGs 지자체 연계 활성화

정부는 2021년까지 지자체 SDGs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기반으로 한 SDGs 현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SDGs 현지화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0년 60%, 2021년 100% 수준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 SDGs 구현을 위하여 민관합작투자사업을 활성화해 되 지역단위의 SDGs 수립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추진 조직 관점에서는 '아젠다21'부터 SDGs까지 지역민관 유기적 조직체로 전환하고 전국 SDG 대회를 통해 지역별 SDGs 구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SDGs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별 지속기능발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K-SDGs 릴레이 포럼 개최

K-SDGs 17개 목표를 3~4개의 주제별로 구성하고 릴레이 포럼 개최하여 K-SDGs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1회차 환경분야 포럼에서는 K-SDGs 6, 7, 11, 12, 13, 14, 15 목표를 논의하고, 2회차 포용사회분야 포럼에서는 K-SDGs 1, 2, 3, 4, 5, 10, 16, 17 목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 3회차 혁신경제분야 포럼에서는 K-SDGs 7, 8, 9, 11, 12 목표를 논의하되 이후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릴레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각 포럼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KEI, 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는 협업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K-SDGs 릴레이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지속기능발전목표(K-SDGs) 포럼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제5장 K-SDGs 세부지표 및 2030 목표

* 신규지표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정망 강화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13.8 → 12.5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가입유형별, 성별)	82.5('17) → 지속확대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지출항목별)	5.9 → 4.6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95.8 → 지속확대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가소득(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16,269('15) → 18,516 30.1('15) → 45
	2-3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밭토양 산도(pH) *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4.9('17) → 10 2.3('17) → 2.4 6.3('17) → 6.4로 개선 또는 악화방지 288('17) → 325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천건) * 토종종자 확보 수	186('17) → 80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심혈관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 인구) * 당뇨병 조절률[%]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 장애인 건강권 확보	32.9('16) → 36.0 40.7('17) → 2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5.6('17) → 6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81('17) → 68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24.3('17) → 11.9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ℓ)	8.7('17) → 7.2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0.08('17) → 0.03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70('17) → 18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0.17('17) → 0.02
	3-8	*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0.84('16) → 지속확대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신생아사망률(%)	1.6('16) → 1.4
			*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13.3('16) → 13.3
교육의 증진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치매안심센터 개소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29위('17) → 지속확대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노인 일자리	
	4-5	교육에서의 성별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 병상 수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PISA: 85.5('17) → 85.6[3과목평균]	
			TIMSS: 98.7('17) → 99.0[2개 학교급, 4개 과목 평균]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58('17) → 75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24('17) → 4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고등교육 이수율(%)	44('17) → 48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평생학습 참여율(%)	35.8('17) → 38.4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16.1('17) → 18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취학률(%)	
			학업중단율(%)	1.32('17) → 1.00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교육의 증진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4-7	지속기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기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기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성인 문해율[%] 성인문해율(수준 1 이하 비율) 지속기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교육과정 내 지속기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언어 2.2('17) → 2.0 수리 4.2('17) → 4.0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학교 내 진보강률[%]	1,374('17) → 8,000 25('22) → 100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57.5('17) → 100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1.0('17) → OECD 평균 5.95('17) → 지속감소 66.9('17) → 100 61.7('17) → 100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60('18) → 75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33.2('17) → 50 3.8('17) → 3.3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 지속적인 확대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을[%]	→ 지속적인 확대 100('17) → 100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성평등 보장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핸드폰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공학계 여학생 비율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을[%]	67.3('18) → 83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전국 상수도 보급률[%]	96.4('17) → 지속확대
	6-2	*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72.8('17) → 지속확대 68.2('17) → 85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3	*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8.0('18) → 9.0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도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수질등급달성을(%) ※ BOD 기준	80.9('17) → 85
	6-5	*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55('17) → 100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상수도 누수율(%)	10.6('16) → 9.2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 물공급 안전율(%)	67.6('17) → 98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10('22) → 100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목표수질 달성을(%)	10('22) → 100
	7-4	*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생태하천 복원율(%)	70.8('17) → 지속확대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수질 '좋음' 등급 비율(%)	80.9('17) → 85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100('17) → 100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만호)	54.6('17) → 100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6('17) → 20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5.0('17) → 13.6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8-7	지속기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m ² ·년)	
	8-8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9.7('17) → 880
	8-9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친환경버스 확대 수	
	8-10	지속기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8-11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인구집단별 고용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8-12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물질 발자국	
문화·체육·관광 분야	9-1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663('16) → 684	
	9-2	여성고용률(%)	56.9('17) → 63.9	
	9-3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65.9('17) → 85.5	
	9-4	*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청년 고용률(%)	
	9-5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2.3('21) → 2.3
	9-6	지속기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사고사망인율(%)	0.52('17) → 0.22
	9-7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3('22) → 5
문화·체육·관광 분야	9-8	지속기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기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	65('22) → 69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사회 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로 보급률(km/천명) *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2.13('17) → 2.16 91('17) → 97.4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3	*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51.6('17) → 52.9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활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4.23('16) → 4.29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국내 자원생산성(GDP /DMC), 자원강도(DMC / GDP)	국내 자원생산성 2.27('16) → 3.03 자원강도('16) 0.44 → 0.33
불평등 해소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소득격차비율(%)	36.8('17) → 31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소득 5분위 배율 인구집단별 빈곤율[%] [노인빈곤율] *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절유율	5.1('17) → 5.1 46.5('17) → 31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율[%] (55세 이상 고용율)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49.4('18) → 55 3.29('17) → 3.6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GDP 대비 가계소득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	65('22) → 확대 수급가구(만호) 135.8('22) → 확대 재정[조원] 1.9('22) → 확대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을[%]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31.3('17) → 확대 저상버스 보급률 22.4('17) → 50 자전거 수단분담률 1.43('17) → 1.52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0.41('17) → 0.55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41.8('17) → 49.3 1.74('17) → 1.87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인구 심판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0.12('17) → 지속감소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8('17) → 100('30)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미세먼지 나쁨일수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GDP 10억원)	95.6('16) → 70.8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보도면적 비율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	9.6('17) → 11.6 8('17) → 100
	12-1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1('17) → 18 여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물질발자국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663('16) → 684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식품 손실 지표 * 식품 폐기물 지표	0.37('16) → 0.34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960('17) → 2,510 97('17) → 140 0.098('16) → 지속감소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59.6('16) → 83.8 75.8('16) → 95.4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35.2('17) → 70 59('17) → 73
	12-8	*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5.98('17) → 10 65.5('13) → 75
	12-9	*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탄소 · 생태발자국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기후변화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16.2('17) → 68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산업계,자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7.6('17) → 20 25('17) → 300 9.7('17) → 880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63.2('18) → 85
	13-4	*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 ₂)	694('16) → 608~574
해양생태계 보전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을(%) *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81.8('17) → 100 82,175('17) → 101,917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 갯벌복원면적(km ²)	15,252('17) → 54,000 0.2('17) → 6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8.1('17) → 8.1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 TAC : 총허용어획량 TAC 대상 어종수(어종) * 감척어선 수(건)	25('17) → 75 11('17) → 20 291('17) → 1,200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28('17) → 39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어가 소득(백만원) *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49('17) → 80 82.3('17) → 87.5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정부연구개발 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3.1('18) → 6.0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조건불리수산작불제 수급률(%) ※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조건불리수산작불제 지원단가(만원)	△3('17) → 20 55('17) → 120
육상생태계 보전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산녹색보호지수	11.6('17) → 지속확대 63.05('17) → 지속확대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건)	36('17) → 54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육상생태계 보전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74.3('17) → 지속확대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등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0('22) → 30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68('17) → 지속확대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148('17) → 500 26,230('17) → 25,000
	15-8	*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 도심/생활권 복원(ha)	315('17) → 700 150('17) → 500
인권·정의·평화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78.8('17) → 지속확대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아동학대 발견율(%)	2.51('17) → 지속확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한다	국가청렴지수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위원회 권고안 이행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사이버폭력 건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16-13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지구촌 협력 강화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GNP 대비 ODA 비율	0.14('17) → 0.30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지구촌 협력 강화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획정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획정	
	17-5	지속기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지속기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17-6	개도국의 지속기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획정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SDGs 이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 회의 건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